

광주 스카이라인 바뀐다

광주시 추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금남로 구간 20층 이상 건물 신·증축

광주시가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환경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도심활성화에 관계된 고층 건물 신축 제한은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보류했으나, 시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안이 통과 될 경우 수년 이내에 광주의 도심지역과 외곽도로변에 20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으며, 영산강·광주천 등과 도심이 연결되는 지역에는 3층 이하의 건물만 세워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고도지구 폐지안

Table with 2 columns: 지구명, 변경내용. Lists various zones and their proposed changes, such as '도심광장' becoming '유동복합중심' and '광안로' becoming '4호관전대안'.

■경관지구 결정안

Table with 2 columns: 지구명, 변경내용. Lists landscape zones and their proposed changes, such as '동산공원' becoming '제1종 자연경관지구 신설'.

도시의 과밀억제, 특정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한 지역이다. 예를 들어 공원 등은 인근 지역과 주변 경관의 차단을 막기 위해 지정한다. 해당 지구의 위치나 특성, 인근 도로폭 등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12m~20m 정도로 제한된다.

수변·공원지역 개발 제한... 도심은 활성화에 중점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요 내용=광주시가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영산강·광주천변 등 수변 및 공원지역과 시내 5개 대학 등 10곳이다.

확정으로 특정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중앙로(태평극장~교도소)는 도심 진입관문의 상징도로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물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상당 부분 제한된다는 사실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향후 움직임이 시의 결정안 통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고고도지구 폐지안도 무분별한 건물 신축을 우려한 환경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 또 하나의 난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산구 산월동·신창동, 서구 유덕·치평동 등 영산강·광주천변에 인접한 4개 지구는 하천을 중심으로 한 경관과 주변의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도심에 가로지르는 전체 수변지역과 시가지가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도시계획위 왜 보류했나=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만큼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이는 경관지구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시의 경관지구 지정 방침이 확고한 만큼 주민 의견 청취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관지구=자연경관과 수변(水邊) 경관, 시가지 경관을 도심환경과 조화롭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만 허용, 환경 저해시설 신축·증축을 할 수 없게 된다.

광산구 첨단지구 봉산공원은 아직 공원 시설이 들어서지는 않은 야산 형태이지만 구릉지의 우수한 녹지를 보존하고, 인근 도로변과 이어지는 조망권을 확보하는 한편 관문로변의 자연 경관을 가꾸기 위함이다.

◇주민반대 없나=경관지구 지정이 추진되면 10개소의 주민들과 토지 및 경관을 가꾸기 위함이다.

전남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은 공공시설로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경관계획을 세워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도심 일부 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규제하는 최고고도지구 중 25개소를 폐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12층 이하의 건물만을 지을 수 있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은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이 됐다. 또한 옛 전남도청 광장·북구 유동 북성중까지의 금남로 전 구간도 건물 신축시 15층 이하로 지어야 하는 제한을 받았었다.

광송간(광주역~상무동) 도로 전 구간은 도심진입의 상징도로 및 도시철도 구간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5층 이하의 건축물 규제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문흥·각화지구는 교도소 이전계획



광주시의 젓줄인 광주천변을 따라 펼쳐진 광주시. 광주시의 도시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광주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바뀌고 하천·공원 인접 지역의 개발은 제한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개헌론 '불쑥'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 불 지퍼 여권발 공론화 가능성 촉각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참패 이후 정치권을 뒤흔고 있는 정계개편론이 잠시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헌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개헌론과 관련 향후 정계개편 및 대선 정국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헌론에 불을 지핀 것은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 임 의장은 지난 19일 취임 인사말을 통해 "21세기에 맞는 헌법의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20일 여당 원내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연구기구를 썼으면 한다"고 한 바 더 나갔다.

정치권에서는 임 의장의 언급을 여당 출신의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사실상 개헌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5·31 지방선거 이전부터 정치권에서는 선거 이후 여권발 개헌론 제기 가능성이 실력있게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선거 참패의 충격과에서 벗어나 국면을 전환시키고,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 재편의 단초를 개헌론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국정운영에 끼어들어 국정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해찬 전 총리도 "2007년 대선에 적용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며, 정동영 전 의장도 "5년 임기의 대통령과 4년 임기의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는 내년을 놓치면 개헌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고 언급했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여당은 선거 이후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할 생각도 없다"며 "임 의장의 언급은 1987년 헌법 체제의 극복을 위해 연구를 시작해야할 시점이 아니냐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임 의장의 발언은 여권 내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나온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개헌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임 의장 발언 직후 "개헌논의를 국회의장이 하느냐"면서 "기껏 뽑아냈는데 그렇게 오버해서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원내대표는 "현 정권하에서 어떤 개헌논의도 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임 의장 발언 직후 한화갑 대표와 이낙연 원내대표,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오찬을 겸한 회의를 갖고 "권력구조를 주요 대상으로 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며 "국회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연구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헌론에 적극 찬성하는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정치권이 흔들릴수록 민주당이 파고 들어갈 빈틈이 생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도시 특별법 처리 또 물 건너가나

국회 법사위 미상정...처리 불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아직까지 미상정된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17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결과 문광위에 소속된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단 한명도 없어 문화중심도시 육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국회 법사위 의안계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광위 등 타 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 86건 가운데 법사위에 미상정된 법안은 모두 65건이며 이 가운데 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논의되는 사실상 어려워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사학법 개정과 연계하고 있는 데다 여야 합의하에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법사위에 우선 상정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상정된 법안이 196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에서나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결과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문광위에 단 한명도 포진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 의원이 문광위에 포진, 문광부 등 정부에 사업 진행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원을 얻어내야 하나 이 같은 역할을 할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17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이 문광위를 외면한 것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을 외면하는 등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김태홍(광주 북) 의원을 문광위원장으로 강력히 밀었으나 결국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밀려나며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일 의원(광주 동)은 "김태홍 의원이 문광위원장을 맡지 못해 아쉽다"며 "그러나 광주지역 의원들이 문광위원장에 포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학교 BK21사업단(팀) 전임인력 모집

전남대학교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제2단계 BK21사업에 대형 13개, 소형(핵심) 14개의 사업단(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90억씩 7년 동안 지원받을 예정이며, 각 사업단(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수한 계약교수(BK21 전담, 비전임),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Table with 6 columns: 연번, 학과(부), 사업단명, 단장, 연락처, 국고지원금(백만원), 모집인원. Lists 13 team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6 columns: 연번, 학과(부), 사업팀명, 팀장, 연락처, 국고지원금(백만원), 모집인원. Lists 14 teams and their details.

